

월/요/광/장

김화중



얼마 전, 한 전국구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학으로 간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런 결정에는 짐작대로 정치(관)에 대한 실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동시에 '그럼에도 경제보다도 정치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원인은 정치권력이 국민의 뜻과 상반없이 장악되고 유지되었던 세월을 오래 겪었던 탓일 것이다. 이런 독재시대에 양자택일 선택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에 국민의 뜻이

여성이 정치개혁 앞장서자

모아지고 힘이 실리면서 우리는 민주사회를 실현할 수 있었다.

불과 10여년의 세월이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민주국가로 변모했다. 기록권에 연연하여 불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리더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주된 노릇 하라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의 빠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어떻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의 독재체제로 회귀할 수도 없고 회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명제이다. 그러자면 정치가 더 이상 더럽거나 부끄러운 것이어

서는 안 된다. 선거가 더 이상 정치를 하고 싶다고 나선 후보자 가운데 누구에게나 유권자가 선심을 베풀어 한 표 던져주는 것일 수는 없다.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슬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자가 나와 준 것을 감사하고, 그런 후보가 없으면 그 중 나은 후보를 찾아 맡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치에 책임을 지는 길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맡을 사람들을 잘 뽑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투표를 올바르게 하는 일과 이에 못지않게 좋은 후보들이 정치시장(政治市場)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는 일이 중요하다. 돈 정치의 차단 등 선거제도의 개선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지역당에 의한 지역정치의 틀은 깨지 못했다. 또한, 여성의 정치 진출이 다소 늘긴 했지만 여전히 심한 남성 주도의 정치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끄럽고 답답한 일이다. 그 개선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된 지 오래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이 논의를 넘어야 근본적으로 당리당략을 바탕

에 칸 건강부회와 아전인수의 역지 변명이 난무해 왔다.

이젠 국민이 나서야 한다. 우리 여성들이 먼저 정치의 중요성과 잘못된 제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치의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여성이 나서면 그동안 뒷맛이 지독한 지역구도에 의지해서 공백한 싸움으로 정치를 더럽혀온 남성주도의 딱딱한 정치를 유연하고 당당한 선진정치로 바꿀 수 있다.

올 연말에는 대선을 치르고, 내년 봄이면 총선이 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한국여성당단체협의회는 올해 '여성이 선거문화를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선거구제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의 50% 비례대표 및 50% 여성 할당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나서서 꾸준한 힘을 모으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남성들이 못해낸 큰 일을 해낼 것이다. 이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실현해야 할 과업이므로, 남성들도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광부의 안이 지역여론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내용과 문화전당 하나만 달달 짓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문광부의 독선으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동안 문화도시사업은 문광부가 지역여론을 외면한 채 독선으로 일관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완 등 지역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종합계획안 시안(4월30일)이 다되도록 반영되지 않은 것만 봐도 문광부의 독선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문광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지역사회와 갈등만 키워 왔다. 급기야 지난 4년 동안 실무를 총괄해 온 문광부 추진기획단 본부장이 전격 사퇴하고 청와대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에 나서

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문화전당 지하설계에 문광부 직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만약의 의혹이 사실일 경우 문광부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아무리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이라해도 지역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된 채 몇몇 문광부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문광부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여론을 반영한 새 틀을 짜야 한다.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아시아성과 광주성을 결합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국가균형개발과 문화산업을 통한 광주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종합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출 빼곤 경제지표 악화 앞날이 걱정이다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올해 각종 경제 관련지표를 보면 수출을 빼곤 모두 부진하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지난해 11월을 정점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하강 추세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를 지탱해준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수출은 지난 2월까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과 유학 등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악화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적신호가 되고 있다.

고용과 생산, 소비시장의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취업자 증가 수가 정부의 목표치인 30만명에 훨씬 못 미쳤고 구직 단념자는 1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생산과 소비의 증가율도 둔화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도 곱불데고 있다.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탈당과 개헌론 등 정국의 불안요인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고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최근 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치게 한 '중국발 쇼크'와 미국경제의 둔화 등 대외여건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인식은 한가하다. 정부는 최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평가를 통해 지난해 경제분야에서 일을 가장 잘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경제분야가 100점 만점에 92.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브리핑도 수출 3천억달러 돌파 등을 들며 참여정부 4년의 경제성적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경제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고, 어둡게 보면 오히려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싸늘하다. 정부는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경제관련 지표가 왜 부진하게 나오는지 그 원인부터 분석하길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오수원

흔히 재판은 법을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 이때 구체적 사실 인정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자료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증거이다. 이 가운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증언이라고 하는 인증과 문서증거인 서증이다.

사이의 대부분의 거래가 이와 같다. 서로 시비가 되어 법정에까지 오게 되었을 때 당사자는 서로 받아 둔 문서가 없으므로 자기가 누구인데 자기를 믿지 못하느냐고 하기도 하고, 죽은 조상을 들먹이기도 하며, 하늘이나 천지신명께 맹세하면서 자기 주장의 진실함과 정당함을 호소하지만 모두 부질없는 일이고 결국은 증인의 증언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법정에서의 부질없는 맹세...

구 등 30이 넘는 항목에 걸쳐서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재판에서 진 사람은 변호사가 성의껏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법관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하거나 법이 잘못했다고 탓하여 재판을 불신한다. 또 불필요한 분쟁과 재판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재판의 기준이 되는 대부분의 법 규범들이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전통법이나 고유법이 아니고 서양에서 만들어져 그 사회에서 사용했던 것이어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맞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 서양법이 이 땅에 들어 온 지도 100년이 넘었고언제까지나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불분명한 증인의 증언에만 의존하려는 재판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으로써 당사자가 부질없이 맹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분쟁이나 재판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변호사〉

횡단보도 교육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일수 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자원 봉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어린이들의 경우 횡단 보도에서는 지나가던 차량이 무조건 멈춰서서 기다려준다. 횡단 보도에서 보행하는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야 차량이 지나가므로 안전하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는 오른쪽에 서 있어야 한다. 달리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해 멈춰설 경우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서있는 어린이를 줄일수 있다. 차는 우측 통행이어서 횡단보도의 왼쪽 부분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은 어느길로 다니던지 왼쪽 통행만을 배워야 한다. 횡단 보도에서도 본능적으로 왼쪽 부분에 서서 기다린다.

이런 기본 사항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는 길이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기고 백종한

3월, 봄의 따스함이 탄취진 마음을 풀어헤치는 3월이다.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새 학년의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개인적으로 3월이면 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다짐한다. 학교운영위원장의 소임을 맡아 애썼던 지난 시간들, 학교폭력을 추방하고자 했던 결의, 좋은 급식을 위해 급식업체 선정과 식자재 검수에 합력했던 일, 학교의 축제를 참관하며 느꼈던 일, 운영위원회의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학교와 선생님 등 교육관계기관, 경찰, 경찰 등 사법기관, 학부모의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시기이다. "맑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천국인 학교를 만들어보자". 상대방(친구, 선생님, 학교, 부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자신이 되자. 여기서 가장 전제 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에 대한 것이다. 힘이 약한 친구가 있을 때 친구를

관심만이 학교폭력 막는다

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일 등 참으로 많은 시간 "우리 아이들의 천국인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실현하려 했는데 아직은 부족함을 느끼며 2006학년도 운영위원장의 임무를 마무리 되어간다.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데 학교와 선생님 등 교육관계기관, 경찰, 경찰 등 사법기관, 학부모의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시기이다. "맑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천국인 학교를 만들어보자". 상대방(친구, 선생님, 학교, 부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자신이 되자. 여기서 가장 전제 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에 대한 것이다. 힘이 약한 친구가 있을 때 친구를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여수의 한 중학생이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끝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등교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빠, 살려주세요 하며 그간의 고통을 말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의 입장에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친구 또는 가정 환경적 사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친구가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담아 도울 수 있는 그런 항기로온 내가 된다면 학교는 천국이 될 것이다. 상대방에게 거친 마음, 거친 행동, 거친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말로 바꿔보자.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 위해 나부터 관심을 갖고 실천하자. 〈포암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광주일보를 읽고

학교폭력 근절, 경호원 지원보다 신고 활성화가 급선무

지난달 27일자 8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경호원 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쓴다.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또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례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로서 몇가지 지적하고 싶다.

학교 폭력은 대부분 목격자가 있지만 피해자는 신고를 못하는게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차후에 다가올 보복이 두려기 때문인데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마음껏 신고할수 있는 보장 제도부터 마련해주는게 급선무 아닐까?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학교 밖의 경호원을 불러서 신분 보호를 요청해야 될 정도인데 학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만 된다면 당장 학교폭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거라고 생각한다. 경호원 지원에 앞서 폭력피해 학생이 신고 했을때 그 학생을 보호하는 제도가 먼저 시행되고, 그래서 폭력 신고가 두려운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횡수가 근본적으로 줄어들게 하는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즉 경호 이전에 학교측이 폭력 자체를 줄이고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 아닌가 묻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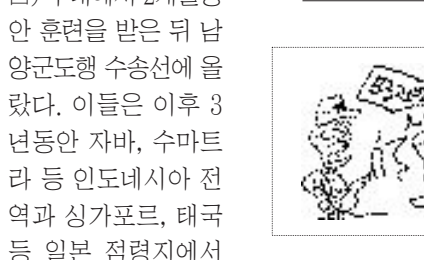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無等鼓

싱가포르의 관문인 창이(Changi)국제공항 인근에 창이행무소가 있다. 매년 수십만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공항을 드나들지만 이 행무소에 관심을 갖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곳은 한민족의 문예 공연장이 담겨 통탄의 장소다.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초, 일제는 연합군 포로를 감시할 조선인 군속을 모집했다. 징집의 광풍 속에 젊은이 3천여명이 선별됐다. 이들은 부산 서면에 있던 노구치(野口) 부대에서 2개월동안 훈련을 받은 뒤 남양군도행 수송선에 올랐다. 이들은 이후 3년동안 자바, 수마트라 등 인도네시아 전역과 싱가포르, 태국 등 일본 점령지에서

조선인 포로감시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을 직접 계획·준비했던 A급 전범재판이 도쿄에서 열렸던 데 반해, 하수인격인 B, C급 전범재판은 현지에서 이뤄졌다. B, C급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선인은 148명(126명은 포로감시원) 중 23명이 사형당했다. 바로 창이행무소의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

포로감시원



조선 젊은이 23명이 전범으로 희생당한 데 반해 일본인 A급 전범은 단 7명만 사형대에 앉았다. 전쟁의 희생자가 가해자가 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사형은 면했지만 유죄로 인정된 포로감시원들은 대부분 조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조연환 포로를 감시했다.

그 포로수용소 중 하나가 바로 창이행무소. 이곳은 당시 싱가포르 거주 유류업자들의 집단 역류소였다.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상황이 역전됐다. 싱가포르의 옛 주인인 영국 주도의 전범재판이 시작되면서 창이행무소는 일본인 전범수용소로 바뀌었다. 전범으로 몰린

그들은 '일제부역자'라고 배척되고, 일본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유족을 중심으로 '태평양 전쟁B·C급 전범자 한국유족회'가 결성됐다. 그들이 희생된 지 무려 60여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오수중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2-8005> <F A X 222-0118>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F A 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02-773-9335>
(F A X 222-4276) 조서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